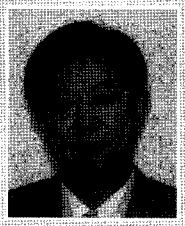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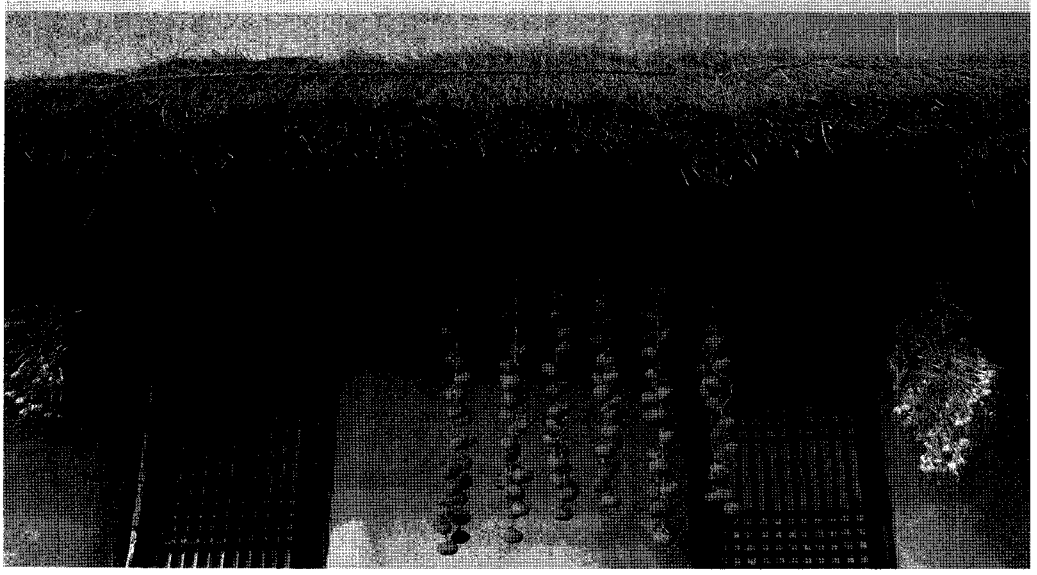
농업 무역자유화 시대의 도래 - 전망과 대응

우리 농산물 특수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노력 있어야

무역자유화 시대의 한국 농업의 유지, 발전의 관건은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산업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비경제적 기능을 국민 전체가 인정하고, 그 결과 합리적인 소득지지정책이 뒷받침 될 때만이 한국 농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것이다.



서 진 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재협상이니 추가협상이니부터 시작하여 자동차와 쇠고기에 대해 미국의 요구사항을 놓고 다시 주고 받기식 협상을 할 움직임이다. 한편 지난 10월 초에는 유럽연합(EU)과의 FTA가 정식 서명되어 양측 국회의 비준동의만 끝나면 내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어디 그뿐 만인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지는 않지만 중국과의 FTA협상도 사전 민감성 처리를 놓고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물 건너간 쌀 관세화도 내년 중에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농업무역 자유화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분위기이다.

사실 한미 FTA 비준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동안 잠잠했던 한미 FTA 비준문제가 다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담까지 한미 FTA 관련 실무협의를 마무리해, 그것이 잘되면 수개월 이내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미국 요구에 대응카드 제시해야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합의도출이 그리 녹녹치 않은 상황이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합의를 이루기에는 자동차나 쇠고기 등의 의제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미국으로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원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킬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했다. 우리나라로서도 쇠고기는 한미 FTA의 의제가 아니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촛불시위의 경험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자동차 역시 이미 합의된 내용을 변경하는 수준은 수용불가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 온 기본입장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불과 2~3주 협상으로 이러한 중요문제에 양국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한미 FTA는 추가협상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쇠고기 문제는 별도의 위생검역협상에서 다루어야 하며, 자동차도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이익을 얻어내어 다시 이익의 재균형을 이루어 내야만이 타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행히 시간은 미국보다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으로서는 다음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하원의원 선거패배의 핵심 원인은 경제문제이다. 미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경제회복을 이를 빠른시간 안에 보여주기란 쉽지 않다. 그나마 수출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민주당이 내

놓을 수 있는 유효한 카드다. 그런데 어떻게 한미 FTA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내년 7월이면 한EU FTA가 발효되어 미국 기업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텐데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따라서 우리로서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대응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라도 이번 추가협상에서 결코 미국에게 밀리지 않았으며, 우리도 많은 것을 얻어내 실질적으로 이익의 재균형을 이루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 누구에게라도 우리도 많은 것을 얻어내 실질적으로 이익의 재균형을 이루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언제까지나 우리 편이 아닐 수 있음에 우리도 주의해야 한다. 사실 2012년이 되면 미국은 대선 분위기에 들어간다. 1월부터 아이오와 주에서 공화, 민주당의 대선경쟁이 시작되어 통상문제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정치상황이 발생한다. 우리도 2012년 4월엔 총선이 있고, 12월엔 대선도 있다. 따라서 2011년을 넘기면 한미 FTA 비준은 자칫 2~3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아무리 늦어도 2011년 중에는 한미 FTA 비준안이 양국 의회를 통과해 적어도 2012년부터는 발효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한미 FTA는 단순히 경제문제만이 아니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 특히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세계 제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우리의 정치외교적 역량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중국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비준이 필수적이다.

농수산분야 예외 인정여부 관건

한중 FTA는 현재 민감성 처리를 위해 사전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한중 양국은 향후 FTA협상 출범시 양측의 입장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시장개방 기대수준과 민감성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한중 FTA의 구조 및 범위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민감성 처리를 위한 사전 실무협의에서 한중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감성 처리와 관련된 핵심사안은 우리 농수산분야에 대한

중국의 예외 인정 여부이다. 그러나 중국측이 사전협의단계에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현재의 사전협의는 양국 국장급의 실무협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무 협상진은 최고위급 의사결정권자와 달리 경제적 실리를 따져 이익의 공유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인 예외를 얻어내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농수산분야 예외 인정 요구에 대해 중국이 역으로 제조업분야에서 그에 상응하는 예외 요구를 해 올 수도 있다. 또한 농수산분야 안에서도 우리가 특정 농수산물의 예외 인정을 요구할 경우 중국도 그 대가로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농수산물에 대해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로서도 정치적 결단 없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농업 본격적인 FTA 시대 도래

자연 한중 FTA협상 개시는 2011년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1년 우리나라가 직면한 통상현안의 최대 이슈는 한미 FTA와 한EU FTA의 국회 비준 문제가 될 것이다. 특히 양대 FTA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수산업 부문은 쌀 중도 관세화라는 또 다른 개방문제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농수산업부문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단이 요구된다.

한EU FTA는 2011년 7월 발효가 되고, 여기에 한미 FTA 역시 2011년 양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중 FTA는 정치적 결단과 리더쉽, 피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대책과 비전 제시 등을 통해 2012년 협상 개시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 농업도 조만간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 제고만으로는 한국 농업의 유지,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가격을 가지고 미국 및 중국산 농수산물과 경쟁한다는 것은 자연 여건의 차이에 따른 생산성 격차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역자유화 시대의 한국 농업의 유지, 발전의 관건은 가격 이외 요인을 가지고 세계 농산물과 어떻게 차별화 시킬 것인지, 그리고 보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소득보전정책에 크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 농산물의 특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노력 없이는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쉽지 않다. 농산업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비경제적 기능을 국민 전체가 인정하고, 그 결과 합리적인 소득지지정책이 뒷받침 될 때만이 한국 농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될 것이다.